



주간 통일정세

2012-23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TV, 김정은 기록영화 이례적 신속제작(5/28, 연합뉴스; 조선중앙TV)**
 -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눈에 띄는 변화를 보여온 북한 조선중앙TV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찬양이나 이상화를 위한 영상물 제작에도 이례적으로 신속하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지난 24일 김 1위원장은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등 간부들을 데리고 개선청년공원유희장과 완공을 앞둔 창전거리, 동평양지구에 건설 중인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 등 평양시내 여러 곳을 방문했으며 이로부터 이틀 뒤인 26일 오후 5시10분 중앙TV는 "새로 나온 기록영화를 보내드린다"며 김 1위원장이 평양시내 여러 곳을 둘러본 내용을 담은 기록영화를 방영함.
 - 기록영화 제목은 각각 '김정은 동지께서 개선청년공원유희장을 현지도하시었다. 2012.5·24' '김정은 동지께서 완공을 앞둔 창전거리를 현지도하시었다. 2012.5·24' '김정은 동지께서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 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2012.5·24' 이며 27일 오후 10시30분에는 새로 만든 기록영화 '김정은 동지께서 중앙동물원을 현지도하시었다. 2012.5·26'을 내보냄.
- **北, 개정 헌법에 '핵보유국' 명기(종합)(5/30,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개정한 헌법에 자국을 '핵보유국'이라고 명기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30일 도쿄에서 확인한 북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내나라'에는 북한의 개정 헌법 전문(全文)이 실려 있음.
 - 북한은 개정 헌법 서문에 지난해 12월에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을 강조하기 위해 3개 문장을 추가하면서 "김정일 동지께서는 세계 사회주의 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 연합 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 압살 공세 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 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 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 강국으로 전변시키시었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었다"고 적어넣음.
 - 2010년 4월9일에 개정한 이전 헌법에는 이같은 표현이 없었음.
- **김정은, 평양시내 소학교·탁아소 등 시찰(5/3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30일 만수대지구 창전거리에 새로



건설된 창전소학교와 경상탁아소, 경상유치원 등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전함.

-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리재일 노동당 선전부 1부부장, 량청송, 박춘홍 당 부부장 등이 수행함.
- 중앙통신은 창전소학교에 대해 "건축면적이 890여㎡이고 연건축면적은 3천800여㎡이며 20개의 교실과 각종 실험실, 교편물실, 컴퓨터실, 외국어학습실, 운동장 등 모든 교육조건과 환경이 갖춰져 있다"고 소개함.

● **北소년들, 代이어 "우리의 아버지인 김정은"(종합)(5/31,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1일 "조선소년단 창립 66돌 경축행사 대표들이 드디어 김정은 동지께서 계시는 평양에 도착하기 시작했다"며 "경축행사에는 근 2만 명의 소년단 대표들이 참가한다. (소년들은) 우리의 아버지인 김정은 선생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이라고 목청껏 외치며 불타는 맹세를 다지고 있다"고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30일 "소년단 창립 66돌 경축행사 준비사업이 완전히 결속됐다"며 "소년단 대표들을 수송할 열차와 비행기, 배 등 운수수단 편성이 끝났다"고 밝혔으며 "환영준비사업과 숙식보장 대책도 빈틈없이 세워졌다"며 "관록 있는 예술단체와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는 경축공연 준비를 최상의 수준에서 끝냈으며 개선청년공원 유희장과 중앙동물원에서도 소년 대표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게 준비사업을 끝냈다"고 전함.

● **北소년단 대규모 행사 개막... '충성 맹세'(6/3, 우리민족끼리; 노동신문)**

-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3일 "오늘부터 평양에서는 조선소년단 창립 66돌 경축행사가 8일까지 성대히 진행된다"며 "김정은 동지의 은정 속에 조국의 최북단 두메산골로부터 분계연선마을, 외진 섬에 이르기까지 전국각지의 모든 소학교, 중학교와 분교에서 선발된 2만여 명의 모범 소년단원들이 경축행사에 참가할 대표로 평양에 초청됐다"고 전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소년단 대표들은)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 태양복을 누리며 선군 조선의 행복동으로 자라는 끝없는 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김정은 선생님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의 계승자로 역세계 준비해갈 굳은 맹세를 다졌다"고 전함.

■ **김정은동향**

- 5/31, 김정은 제1위원장, 창전거리에 새로 건설된 아동백화점·살림집·창전소학교·경상탁아소·경상유치원 현지지도(5.31, 중통)
 - 장성택, 리재일(당 제1부부장), 량청송·박춘홍(당 부부장) 등 동행



■ 기타 (대내 정치)

- 최영림 내각총리, 5.30 순천화학연합기업소 현지요해(5.30, 중통)
- 최룡해 총정치국장, 5.30 통일거리운동센터 현지요해(5.30, 중통)
- 「청년동맹」 중앙위 부장 김남철, '조선소년단 창립(1946.6.6) 66돌 경축행사(전국 도·시·군에서 추천된 2만명의 대표들 참가) 대표 선출 및 준비사업 완료' 언급(5.30, 중통)
 - 6월 3일부터 8일까지 유례없는 규모로 성대히 진행 예정
 - 경축행사에 참가할 라선시·함경북도 소년단 대표들, 5.30 오전 특별비행기로 평양 도착(5.30, 중방)
- 최룡해(軍 총정치국장), 5.31 평양민속공원 건설장 현지 요해(5.31, 중통)
 - 황해남도(웅진군·강령군 등)와 개성시의 '가물과의 투쟁'(5.25, 5,400여 정보 발 물주기 등) 박차 및 만수대지구건설 완공단계·준공검사 준비(5.31, 평·중방)
- 최영림 내각총리, 6.1 아동백화점 현지 요해(6.1, 중통·중방)
- 6.1국제아동절 62돌기념 친선연환모임, 6.1 대성산유원지에서 진행(6.1, 중통·중방)
 - 최태복(黨비서),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한광복(내각부총리), 김승두(교육위원장), 량만길(평양시인민위원장) 등 참가
- '조선소년단' 창립 66돌 경축행사 참가 전국 각道·市 소년단 대표들의 6.3 평양시내 참관 동향 및 반향 등 집중 보도
- '평양시 등 전반적 지방에서 심한 가물로 농작물 피해 매우 심각한 지경'이라며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 것" 독려(6.3, 중방/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진다)

나. 경제

● 北, 심각한 가뭄..외부 지원 기대 어려워(5/28, AP통신)

- 북한에 지난 4월27일 이후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심각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지만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이어지면서 미국과 한국 등 외부로부터의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AP통신이 북한의 남포발로 28일 전함.
- 이번 가뭄으로 북한의 서부 해안지역이 특히 큰 피해를 입었다고 AP통신은 북한 기상당국을 인용해 보도했으며 취재진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방문했던 평안남도의 한 지역의 천수답은 그야말로 거북등처럼 갈라져있는 상태였으며, 농부들도 지독한 가뭄에 지쳐 있었음.
- 남포지역의 한 협동농장에서 일하는 안송민이라는 농부는 "여기서 30년 넘게 농사를 지었지만 이번 같은 가뭄은 처음 겪는다"고 AP 취재진에 말함.
- 이런 현상이 다른 북한 지역의 양상을 대변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유엔 식량지원 당국은 현재까지 심각한 가뭄에 시달리는 북한지역에 대한 현장 방문을 하지 않은 상황임.

- 하지만 미국은 지난 2009년 이후 이른바 '모니터링 문제'로 인해 대북 식량지원을 중단했으며, 최근 식량(영양) 지원과 비핵화 사전조치를 고리로 한 북미간 '2.29 합의'가 발표됐지만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합의가 무산된 상태이고 한국의 이명박 정부도 2008년 취임 이후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대북 식량 지원을 하지 않고 있음.

● 中 두만강 지역 '훈춘 국제합작시범구' 착공(5/30, 길림신문)

- 중국이 북한,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두만강 지역에 국제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2020년까지 조성할 계획인 '훈춘 국제합작시범구'(이하 시범구)가 정식 착공됐다고 길림신문(吉林新聞)을 비롯한 현지 매체들이 30일 보도함.
- 중국 지린(吉林)성은 29일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시에서 시범구 착공식을 하고 본격적인 건설 사업에 들어갔으며 훈춘 서북쪽에 있는 시범구는 전체 면적이 90km²에 이르며 국제산업합작구역, 국경무역합작구역, 북·중훈춘경제합작구역, 중·러훈춘경제합작구역 등 4개 구역으로 나뉘어 조성됨.
-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이 시범구 건설을 승인하면서 조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 세제, 금융, 통관, 토지이용, 사회기반시설 건설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국내외 기업을 적극 유치하기로 함.

● 작년 북한 대외무역 63억 달러..사상 최대(5/31, 연합뉴스)

-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남북교역은 제외)이 1990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인 63억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31일 연합뉴스가 전함.
- 코트라가 31일 발표한 '2011 북한의 대외무역동향'에 따르면 북한의 수출은 전년보다 84.2% 증가한 27억9천만 달러, 수입은 32.6% 늘어난 35억3천만 달러로 전체 무역규모가 51.3% 커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역적자는 7억4천만 달러로 집계됨. 수출은 석탄·철광석 등 광물과 섬유제품, 수입은 원유·곡물·기계류 등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됨.
-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커졌으며, 대중국 무역은 56억3천만 달러(수출 24억6천만 달러, 수입 31억7천만 달러)를 기록, 전년보다 62.4% 증가함.
- 중국과는 큰 격차이지만 러시아, 독일, 인도, 방글라데시,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네덜란드 등이 뒤를 이었다. 러시아와의 무역액은 2% 증가한 1억1천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독일, 인도와의 무역액은 감소함.

● 北, 대량 아사 '군량미 공출이 원인' 인정(6/1, 마이니치신문)

- 북한이 황해남도에서 연초에 발생한 대량 아사(餓死)와 관련 '인재'임을 인정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일 보도함.



- 이 신문은 베이징발 기사에서 북한 무역관계자의 증언을 인용해 조선노동당 지도부가 지난 3월 중순 작성한 내부 문서에서 대량 아사가 군을 위한 과도한 식량 공출이 원인이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전함.
 - 황해남도의 연안과 백천, 청단 외에 황해북도 개성시의 일부 지역에서도 연초 집단농장의 노동자와 가족 등이 다수 굶어 죽었는데 조선노동당이 작성한 내부 문서는 이에 대해 "황해남도가 수해로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 특히 농장원들 가운데 식량 부족으로 어려운 세대가 증가했다"고 식량난을 언급함.
 - 문서는 이어 "농장 세대가 군량미를 보장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해 식량난이 흉작뿐 아니라 과도한 군량미 공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함.
- **印尼, 200만 달러 對北 식량지원 계획(6/1, 템포)**
- 인도네시아 정부가 북한의 식량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200만 달러 상당의 식량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도네시아 주간지 템포 인터넷판이 1일 보도함.
 - 템포는 마르티 니탈레가와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이 지난달 30일 국회 답변을 통해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200만 달러 지원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말했다고 전함.
 - 그는 북한에 대한 지원은 오래전부터 계획됐지만 시행과 관련한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며 "우리는 인도주의적 지원이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기를 원한다"고 말함.
- **中 유례없는 '北 관광 붐'...관광코스 배로 늘어(6/1, 연합뉴스)**
- 최근 중국에서 출발해 북한 곳곳의 명승지를 여행하는 관광 코스가 많이 늘어나는 등 중국에서 유례없는 북한 관광 붐이 일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중은 예전에도 3~5개의 관광코스를 꾸준히 유지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코스가 10여개로 증가했다. 중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관광형태도 눈에 띄게 다양해짐.
 - 기존의 북한 관광은 전세기를 이용해 평양이나 금강산 인근 원산공항에 내려 버스로 이동하는 형태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비행기 이외에 기차, 자가용, 유람선, 도보 관광 등이 생김.
 - 지난달에는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투먼(圖們)에서 함경북도 칠보산을 잇는 관광열차가 북·중 관광철도 노선으로는 처음 개통됐으며 관광을 위한 수속도 간소해져 칠보산 철도관광은 중국인 관광객이 여행사에 신분증 복사본을 제출한 뒤 여행 전날 투먼에 도착, 신분 확인을 하면 여권 없이도 '변경여행통행증'을 받을 수 있음.
 - 중국인 관광객이 자가용을 타고 연변주 훈춘(琿春)을 출발, 2박3일간 북한 나선 지역을 관광하는 코스도 지난해 시작됐고 올해는 겨울철을 지나 4월 재개돼 한 차례에 100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몰리고 있음.



- **北 원정리-나진항 도로 건설 순항(6/1, 연변인터넷방송)**
 -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 벨트를 잇는 간선도로 역할을 하게 될 북한 원정리~나진항 도로 건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연변인터넷방송이 1일 보도함.
 - 중국은 2008년 나진항 부두 사용권을 확보하면서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맞닿아 있는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원정리~나진항 도로 건설을 약속했는데 훈춘~나진항 53km 구간 중 원정리~나진항 도로는 50.3km임.
 - 총사업비는 2억2천만위안(약 396억 원)으로, 나진항 부두 사용권을 확보한 중국 측이 부담하며, 방송은 지난해 4월 착공된 이 도로 공사가 1차로 지난해 10월까지 진행돼 노반공사 48km, 포장공사 33km, 소형교량 2개 건설, 중·소형 교량 8개 교각 건설 등을 끝냈다고 전함.

- **김정일 사후 5개월간 日서 현금 56억 원 복송(6/2, 요미우리신문)**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뒤 5개월간 일본에서 북한으로 보낸 현금이 신고된 금액만 3억7천760만 엔(56억8천800만원)에 이른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일 보도함.
 - 일본 재무성이 중의원(하원) 납치문제특별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집계 결과를 공개했으며, 건수로는 348건이었음.
 - 3월까지의는 매달 3천만~6천만 엔 정도였지만 고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행사가 열린 4월에는 2억1천470만 엔(32억원)이 북한으로 넘어감.

다. 사회·문화

- **홍콩서 일반인 대상 北 영상물소개사이트 개설(5/29, 연합뉴스)**
 - 일반인을 상대로 북한의 각종 영상물과 사진들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사이트가 최근 홍콩에서 개설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홍콩에 있는 '국제 무비 비디오'(Kuk Jea Movie Video)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목란비디오' 사이트(www.kmvc5.com)에는 북한 영화와 TV 드라마, 만화, 다큐멘터리, 각종 공연물 등 영상물 1천280건과 음악 7천100여곡, 백두산과 평양 모습 등을 담은 사진 930여장, 북한 우표 1천929장 등 북한의 영상 관련 자료들이 대규모로 올라와 있음.
 - 홍콩에 서버를 둔 이 사이트는 조선어(북한말)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5개 국어로 운영되고 있다. 또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콘텐츠는 회원으로 가입한 뒤 1~3달러 정도의 가격에 내려 받을 수 있게 돼 있음.
 - 이 회사는 홈페이지에 있는 회사 소개글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목란비디오' 영화 및 음악들을 전문적으로 판매보급하는 회사"라고 자신들을 소개하면서 "목란비디오회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록영화, 과학영화, 예술영화, 아동영화, TV편집물, 무대편집물과 음



악들에 대한 녹음(녹음) 녹화물(녹화물) 제작, 판매권, 저작권리권을 가진 유일한 회사"라고 설명함.

- **北주민 외부정보 획득, DVD→중국인→라디오 順(6/3, 연합뉴스)**
 - 북한 주민들은 DVD와 CD, 라디오, 중국인 등을 통해 외부사회의 정보를 얻고, 이를 구두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3일 연합뉴스가 전함.
 -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박대광 현역연구위원과 김진무 연구위원은 KIDA가 최근 발간한 '국방정책연구'(2012년 봄호)에 게재된 '북한으로의 외부사조 유입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북한 이탈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외부정보 유통과 전파 행태를 추정함.
 - 설문조사에는 2008~2009년 탈북해 국내에 정착한 사람 가운데 71명(남 33명, 여 38명)이 참여했으며 이 설문 결과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거주할 당시 외부정보 획득 수단을 DVD·CD(21.8%), TV(18.3%), 중국인(17.6%), 라디오(15.5%), 휴대전화(6.3%), 전단지(5.6%) 순으로 꼽음.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北 각기 사찰들, 5.28 '불기 2556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조국통일기원 법회' 진행(5.28,중통·평방)

2. 대외정세

가. 일반

- **北 "美인권보고서는 도적이 매 드는 격"(5/30,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미국이 지난 24일 발표한 '2011년 인권보고서'에 대해 "인권유린의 왕초인 미국이 '인권재판관' 행세를 하는 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함.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에서 "인권문제를 세계지배 전략 실현의 정치적 도구로 삼는 것은 미국의 고질적인 악습"이라며 "우리나라는 미국이 가장 적대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당연히 매해 고정대상으로 올라 있다"고 강조함.
 - 대변인은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 타령은 본질에 있어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며 한 나라 인민의 선택권을 부정하는 대형 인권유린행위"라며 "미국이 행동으로는 우리의 경제발전을 가로막으면서 말로만 '민생'을 운운하는 것은 우리 내부를 어찌 보려는 어리석은 심리전 기도"라고 비난함.



- **中, 北 핵보유국 헌법 명시에 직담 피해(6/1,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이 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최근 개정 헌법에 '핵 보유국'으로 명시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류 대변인은 자국의 국제뉴스 전문매체인 환구시보 기자가 북한이 헌법을 고쳐 핵보유국으로 지칭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게 각 측의 공통 이익에 부합하며 이를 위해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함.

- **中어선들 뒷돈 주고 北해역서 불법어로(6/2, 남방인물주간)**
 - 최근 중국 동북 지역의 어선 3척이 정체불명의 북한 무장 선박에 나포됐다가 풀려나 북중 접경 해역에서의 어로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중국의 일부 어선이 북한에 뒷돈을 주고 불법어로를 한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중국 주간신문인 남방인물주간(南方人物周刊)이 2일 보도함.
 - 이 신문 기자가 북중 접경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이 많은 랴오닝성 다롄(大連)과 단둥(丹東)의 어민들을 현장 취재한 결과 환경 오염과 어족 자원 고갈로 중국쪽 해역에서 더는 조업할 수 없게 된 선주들이 월경을 봐주는 대가로 북한에 돈을 주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것임.
 - 단둥의 한 선주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단둥에서 국경을 넘어 고기잡이 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라며 "중국 쪽 바다는 이미 씨쓸이 조업으로 고기가 없어서 북한(해역)에 갈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음.

■ 기타 (대외 일반)

- [北 외무성대변인 담화(5.29)] 美 '2011년 인권보고서' 발표 관련 '인민 자신이 선택한 사회주의제도를 고립 압살해보려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 인민의 선택권을 부정하는 대형인권유린행위'라고 비난(5.29,중통)
- △UN 안보리·G8 정상회, 北 장거리미사일 비난 '공동성명', △美·서방 對이란 제재지속, △韓-美-日 동향(맥스 썬더 연습 등, 군사협정체결 추진), △對日문제(자위대, 남부수단 파견) 등을 "5월의 국제정세흐름"이라며 '反帝투쟁' 주장(5.31,중방·노동신문/평화는 투쟁으로 쟁취해야 한다)

3. 대남정세

- **北조평통 "南측 문제는 중북 아닌 중미"(5/3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31일 서기국 보도를 통해 "오늘 남조선에서 문제 되는 것은 중북이 아니라 중미"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조평통은 최근 새누리당이 부정경선과 '중북 주사파' 논란에 휩싸인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을 국회에서 제명하려는 데 대해 비난하면서 "국회에서 끌어버려야 할 세력은 새누리당 족속과 같은 친미매국 역적과 반통일대결광신자, 파쇼와 부정부패의 주범들"이라고 강조함.
- 이어 "보수패당의 이러한 모략소동은 친미 보수세력의 재집권을 위한 현대판 '마녀사냥, 추악한 파쇼적 정치테러'라며 "보수패당은 이번 기회에 남조선 진보세력을 완전히 말살해 올해 대선에서 재집권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해보려고 발악하고 있다"고 비난함.
- 조평통은 "괴뢰패당의 논법대로 한다면 평양에 밀사를 파견해 우리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을 고스란히 다 받아 물고 7·4공동성명에 도장을 찍은 이전 유신독재자야말로 '중북 빨갱이'의 원조"라고 주장함.

● 北 "6·15행사 남·북·해외서 따로 진행"(6/1, 조선중앙통신)

-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와 남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는 "6·15공동선언 발표 12돌 기념행사를 북, 남, 해외 지역별로 진행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전함.
- 공동보도문은 "6·15민족공동위원회는 지난 2월 상순 중국 선양에서 진행된 북, 남, 해외 실무접촉에서 6·15공동선언 발표 12돌을 맞아 금강산에서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를 성대히 개최하기로 협의했다"며 "하지만 남측 당국의 부당한 접촉거부와 악랄한 동족대결 책동으로 인해 북, 남, 해외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기념행사를 지역별로 진행하기로 한다"고 밝힘.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6·15공동선언 12주년을 맞이해 올해 기념행사와 관련한 공동보도문을 발표한다"며 "이번 공동보도문은 1일 오전 10시에 서울과 평양, 해외 각 지역에서 동시에 발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함.

■ 기타 (대남)

- 北 '조평통' 서기국, 5.31 최근 남측의 '중북세력 문제'는 '진보세력의 국회 진출 저지책동, 친미보수세력의 재집권을 위한 추악한 파쇼정치테러'라고 '反보수투쟁' 선동 '보도 제999호' 발표(5.31, 중통)
- 李대통령의 라디오 연설(5.28, 우리 내부의 중북세력이 더 큰 문제 등)은 '진보세력탄압을 위한 색깔·이념공세, 정권연장 타산'이라고 왜곡 비난 지속(5.31, 우리민족끼리/까무라치는 길을 택한 이○○의 광란적 칼춤)
- 6.15공동선언실천 남북해외측위원회, 6.1 '南' 당국의 접촉거부와 동족대결책동으로 인해 한자리에 모일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기념행사를 南, 北, 해외 각 지역별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공동보도문 발표(6.1, 중통·평방)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北, 개정 헌법에 '핵보유국' 명기(5/30)

- 북한이 최근 개정한 헌법에 자국을 '핵보유국'이라고 명기한 것으로 밝혀졌음. 30일 도쿄에서 확인한 북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내나라'에는 북한의 개정 헌법 전문(全文)이 실려 있음. 북한은 개정 헌법 서문에 "김정일 동지께서는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 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면시키셨다"고 적어 넣었음.
- 이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김정은 체제에서도 외교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됨.
- 북한은 최근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 헌법을 통과시켰음. 북한은 지금까지 헌법을 '김일성 헌법'이라고 정의했지만, 새로 개정된 헌법에서는 '김일성-김정일 헌법'이라고 규정했음.

● <北헌법 '핵보유국' 명기 의도와 파장>(5/30)

- 북한이 최근 개정한 헌법에 자국을 '핵보유국'으로 명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제 외교가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음.
- 우선 북한을 진정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인가라는 해묵은 논란이 재연됐음. 통상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핵보유국'의 의미는 두가지로 나뉨. 우선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하에서 특별적으로 인정하는 핵보유국으로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가 이에 해당됨. 이와 달리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NPT에는 가입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있음.
- 북한은 현재 NPT를 탈퇴한 상태임. 따라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후자의 경우라고 할 수 있음. 핵문제에 있어 북한의 핵심 상대국인 한국과 미국은 물론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식하는 기류는 최근 몇 년 전 부터 확산돼왔음.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이미 핵실험까지 한데다 영변 핵단지에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시설까지 갖추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과시한 북한의 핵능력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는게 정설임.
- 이 때문에 올 1월 민간단체이긴 하지만 군축관련 비정부기구(NGO)인 핵위협방지구상(NII)이 북한을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과 함께 9대 핵보유국에 포함시킨 보고서를 공식 발표하기도 했음. 또 북한의 핵능력에 맞서 1990년대초 철수했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음



- 직임이 최근 한국과 미국 일각에서 일고 있음.
- 북한이 이 시점에서 헌법에까지 핵보유국임을 명시한 의도는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음. 김정은 체제의 출범에 맞춰 핵무기 보유를 공식화함으로써 이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으려는 속셈이 내재돼있는 것으로 보임. 이는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을 중심으로 향후에도 '선군정치'의 기치에 따라 대외 강경노선을 견지할 가능성을 예고함. 또 '김정일의 업적'을 서술하면서 핵보유국 대목을 포함시킨 것은 '김정일의 유훈'에 따라 핵능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됨.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이라는 외교적 카드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느껴짐.
 - 이렇게 되면 당장 북핵 6자회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음. 6자회담의 핵심목표인 '한반도 비핵화'의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임. 이에 따라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북한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마찬가지로 핵보유국을 자처하면서 6자회담을 '핵군축의 장'으로 만들자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큼. 동시에 핵보유국이 아닌 한국과 일본의 위치는 6자회담에서 위축될 수 있음.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동아시아를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그 여파로 NPT체제의 존립이 위협받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

● 美 "北 핵보유국 절대 인정 안할 것"(5/31)

- 미국 정부는 30일(현지시간) 북한이 최근 개정한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기한 것과 관련,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음. 마크 토너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북한 개정헌법과 관련한 연합뉴스 기자의 질문에 "미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a nuclear power)'으로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오랜기간 유지해 왔다"고 밝혔음. 특히 그는 "지난 2005년 '9.19 공동선언'에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돼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이런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토너 부대변인은 "지난달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은 북한에 대해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에 따른 의무를 즉각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이는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미 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포함된 모든 국제 의무를 따를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어 토너 부대변인은 "북한의 지도부는 매우 냉혹한 선택에 직면해 있다"면서 "그들의 정책을 냉정하게 검토하고,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핵보유국이 되려는 야욕에 앞서 주민들을 먼저 챙기고, 국제사회에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북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내나라'에 따르면 북한은 개정 헌법 서문에서 지난해 12월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을 강조하면서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을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 **中, 北 핵보유국 헌법 명시에 직담 피해(6/1)**

-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이 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최근 개정 헌법에 '핵 보유국'으로 명시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음. 류 대변인은 자국의 국제뉴스 전문매체인 환구시보 기자가 북한이 헌법을 고쳐 핵보유국으로 지칭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게 각 측의 공통 이익에 부합하며 이를 위해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음.
- 앞서 일본 언론매체들은 지난달 30일 북한이 개정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시해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이에 같은 날 마크 토너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미 정부는 북한을 '핵 보유국(a nuclear power)'으로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오랜 기간 유지해 왔다"면서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음.

● **〈中, 6월 안보리의장 수입...北핵실험 변수될까〉(6/2)**

-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과 그 시점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관측이 쏟아지는 가운데 유엔 주변에서는 최소한 6월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6월 순번제 의장국을 북한의 최대 후견국인 중국이 맡았다는 점서임.
- 유엔 고위 당국자는 2일(현지시간)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1,2차 핵실험을 했던 과거의 패턴을 볼때 이번에도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는게 중론"이라며 "하지만 안보리 주변에서는 최소한 6월은 피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음. 이 당국자는 "안보리에서 북한을 대변하는 사실상의 유일한 강대국이 중국인데, 의장국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는 핵실험에 대한 운신의 폭이 너무 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 5월 하순으로 접어들면 6월 말까지는 핵실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진작부터 나돌았다"며 "5월 말에 핵실험을 해도 안보리의 조치는 중국이 의장국이 되는 6월에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 반면, 중국의 안보리 의장국 수입이 핵실험 시기에 결정적 변수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음. 핵실험의 경우 최고 수위의 도발이기 때문에 중국이 안보리 의장국이 아니라고 해도 북한 편을 들기는 힘들다는 인식서임. 중국은 1,2차 핵실험 때에도 제재논의 과정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지는 않았음.
- 북한은 2006년 미사일을 발사(7월5일)한지 2개월여 만인 10월9일 1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2009년에도 장거리 미사일을 쏘고(4월5일) 나서 50일 뒤인 5월25일 2차 핵실험을 했음. 지난 4월13일 북한이 '광명성 3호'를 발사하자 3차 핵실험이 뒤따를 것이라는 추론이 나온 것도 이런 전례 때문임.
- 중국은 북한이 광명성 3호 발사를 강행한 직후 국제사회의 비판기류를 의식, 안보리가 역대 최단 시일내에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담은 의장성명을 채택하는데 비교적 순순히 응했음. 하지만 이 의장성명에 따라 대



북 제재기업을 추가 지정하는 과정에서는 다시 한번 본색을 드러냈음. 우리 정부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기존 제재 리스트에 총 40 여곳을 추가하기를 원했지만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난색을 표시, 결국 3개 업체를 보태는데 그쳤던 것임.

- 최근까지 북한은 3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이중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음.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지난달 22일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에서 "처음부터 평화적인 과학기술위성 발사를 계획했기 때문에 핵실험과 같은 군사적 조치는 예견한 것이 없다"고 밝힌 것은 당분간 핵실험이 없다는 뜻으로 읽혔음. 그러나 곧바로 "미국의 적대정책이 계속되는 한 핵억제력은 멈춤 없이 확대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 조성될 경우 언제든지 '핵카드'를 꺼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됐음.
- 같은 날 군사분석기관 'IHS 제인'의 위성사진 분석 자료를 인용한 CNN의 보도에서는 북한 핵실험장에서 굴착장비의 움직임이 관측됐고, 우리 정부도 풍계리 핵실험장에 새로운 도로와 구조물이 건설된 사실을 확인했음. 중국의 북한 전문가인 장롄구이(張琏圭(王+鬼)) 중국 공산당중앙당교 정치학 교수는 지난달 23일 "북한이 '가까운 장래에' 분명히 추가 핵실험을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음.
- 안보리는 북한이 1,2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당일 곧바로 소집돼 제재는 의에 착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각각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음.

나. 미·북 관계

● 北 "美인권보고서는 도적이 매 드는 격"(5/30)

- 북한 외무성은 미국이 지난 24일 발표한 '2011년 인권보고서'에 대해 "인권유린의 왕초인 미국이 '인권재판관' 행세를 하는 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음.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에서 "인권문제를 세계지배 전략 실현의 정치적 도구로 삼는 것은 미국의 고질적인 악습"이라며 "우리나라는 미국이 가장 적대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당연히 매해 고정대상으로 올라 있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 타령은 본질에 있어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며 한 나라 인민의 선택권을 부정하는 대형 인권유린행위"라며 "미국이 행동으로는 우리의 경제 발전을 가로막으면서 말로만 '민생'을 운운하는 것은 우리 내부를 어찌 보려는 어리석은 심리전 기도"라고 비난했음.
- 미국은 24일(현지시간) 발표한 '2011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매우 열악한(extremely poor) 상황"이라고 평가했음.



다. 중·북 관계

● 中 두만강 지역 '훈춘 국제합작시범구' 착공(5/30)

- 중국이 북한,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두만강 지역에 국제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2020년까지 조성할 계획인 '훈춘 국제합작시범구'(이하 시범구)가 정식 착공됐다고 길림신문(吉林新聞)을 비롯한 현지 매체들이 30일 보도했음.
- 중국 지린(吉林)성은 29일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시에서 시범구 착공식을 하고 본격적인 건설 사업에 들어갔음. 훈춘 서북쪽에 있는 시범구는 전체 면적이 90km²에 이르며 국제산업합작구역, 국경무역합작구역, 북·중훈춘경제합작구역, 중·러훈춘경제합작구역 등 4개 구역으로 나뉘어 조성됨.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이 시범구 건설을 승인하면서 조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 세제, 금융, 통관, 토지이용, 사회기반시설 건설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국내외 기업을 적극 유치하기로 했음.
- 두만강 하류에 있어 북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훈춘은 북·중이 공동개발하기로 한 북한 나선특구와 중국이 동해 항로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권을 획득한 나진항과 연결되는 대북 창구이자 하산 등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교역 거점임. 중국은 훈춘-나진을 통해 동북에서 생산되는 지하자원과 곡물을 남방으로 운송하고 한국, 일본과의 교역도 확대할 계획임.
- 훈춘 국제합작시범구 조성이 본격화하면서 창춘(長春)-지린-투먼(圖們)을 잇는 '창지투 개방 선도구' 사업도 속도를 더할 것으로 예상됨. '창지투'와 북한 나선특구를 연결, 동북아시아의 물류 거점으로 삼으려는 중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 훈춘을 중심으로 남·북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경협지대를 건설하려는 구상으로 풀이됨. 나선특구와 연계돼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훈춘 시범구가 중국의 의도대로 초국경 경제협력지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북한, 러시아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참여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 남·북한과 북·일 관계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 이처럼 북·중 접경인 두만강 지역 경협사업이 활기를 띠는 것과 달리 압록강 지역 경협사업은 이렇다 할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음.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단둥과 맞닿은 황금평은 지난해 6월 북·중이 대규모 착공식을 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개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음. 현지에서는 중국 측이 압록강 주변지역에 미분양 산업단지가 넘쳐나는 데다 황금평이 압록강에 떠 있는 고립된 섬이기 때문에 북한 진출에도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해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北 원정리-나진항 도로 건설 순항"〈中매체〉(6/1)

-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 벨트를 잇는 간선도로 역할을 하게 될 북한 원정



리~나진항 도로 건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연변인터넷방송이 1일 보도했음. 중국은 2008년 나진항 부두 사용권을 확보하면서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맞닿아 있는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원정리~나진항 도로 건설을 약속했음.

- 훈춘~나진항 53km 구간 중 원정리~나진항 도로는 50.3km임. 이 사업은 기존의 좁은 비포장도로를 넓혀 포장하고 중간에 중·소형교량 11개를 놓는 것이 주 내용임. 총사업비는 2억2천만위안(약 396억원)으로, 나진항 부두 사용권을 확보한 중국 측이 부담함.
- 방송은 지난해 4월 착공된 이 도로 공사가 1차로 지난해 10월까지 진행돼 노반공사 48km, 포장공사 33km, 소형교량 2개 건설, 중·소형 교량 8개 교각 건설 등을 끝냈다고 전했다. 올해 4월 재개된 공사에는 현재 북한과 중국의 시공인원 900여명이 투입돼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보도했음. 훈춘의 소식통들은 이 도로 공사가 앞으로 2~3개월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중국은 두만강 유역 경제벨트인 '창지투(長吉圖·창춘-지린-투먼) 개방 선도구'를 건설하고 훈춘-나진을 연결고리로 삼아 이 일대를 국제적인 물류 거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임. 훈춘-나진 구간은 53km에 불과하지만, 비포장인데다 굴곡이 심해 물자 대량 운송의 걸림돌로 지적돼왔음. 이에 따라 도로 공사가 마무리되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중국의 북한 나진항 뱃길 기동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中 유례없는 '北 관광 붐'...관광코스 배로 늘어>(6/1)

- 최근 중국에서 출발해 북한 곳곳의 명승지를 여행하는 관광 코스가 많이 늘어나는 등 중국에서 유례없는 북한 관광 붐이 일고 있음. 북·중은 예전에도 3~5개의 관광코스를 꾸준히 유지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코스가 10여개로 증가했음. 중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관광형태도 눈에 띄게 다양해졌음.
- 기존의 북한 관광은 전세기를 이용해 평양이나 금강산 인근 원산공항에 내려 버스로 이동하는 형태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비행기 이외에 기차, 자가용, 유람선, 도보 관광 등이 생겼음. 지난달에는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투먼(圖門)에서 함경북도 칠보산을 잇는 관광열차가 북·중 관광철도 노선으로는 처음 개통됐음. 관광을 위한 수속도 간소해져 칠보산 철도관광은 중국인 관광객이 여행사에 신분증 복사본을 제출한 뒤 여행 전날 투먼에 도착, 신분 확인을 하면 여권 없이도 '변경여행통행증'을 받을 수 있음.
- 중국인 관광객이 자가용을 타고 연변주 훈춘(琿春)을 출발, 2박3일간 북한 나선 지역을 관광하는 코스도 지난해 시작됐고 올해는 겨울철을 지나 4월 재개돼 한 차례에 100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몰리고 있음. 이 관광상품은 훈춘시 권하통상구에서 도로로 북한 원정리를 거쳐 나선에 이르는 코스로, 연변일보를 비롯한 현지 매체들이 올해 인기를 끌 관광상품으로 꼽는 등 호응을 얻고 있음.



- 이달에는 라오닝성 선양(瀋陽)과 평양을 전세기로 연결하는 관광코스가 새롭게 개통되고 연변주 연지(延吉)에서 비행기 편으로 평양·원산공항으로 이동, 금강산을 관광하는 코스도 추가로 열릴 예정임. 지난해 9월부터 시범 운영된 훈춘(琿春)에서 북한 원정리를 거쳐 나선시 고성항을 출발하는 금강산 유람선 관광은 이달부터 정식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 이처럼 북·중 관광이 활기를 띠는 것은 중국인 해외관광객이 급증하는 가운데 북한 사회와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은 중국인 수요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됨. 연변대 경제관리학원 이종림 교수는 1일 "중국인의 해외 관광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북한 관광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여행사들이 비즈니스 차원에서 다양한 고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발 빠르게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관련 신상품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런 인적교류 활성화가 경제 분야 등 북·중간 다양한 방면의 교류 확대에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북·중 관광코스 개설이 정부간 사전 협의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탈기 위해 중국 측이 간접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북한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외자 유치가 투자 이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반면 관광은 단기간에 외화를 벌 수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 경제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풀어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양측의 이런 이해가 맞물려 북·중 관광이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 "중어선들 뒷돈 주고 北해역서 불법어로"〈中매체〉(6/2)

- 최근 중국 동북 지역의 어선 3척이 정체불명의 북한 무장 선박에 나포됐다가 풀려나 북중 접경 해역에서의 어로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중국의 일부 어선이 북한에 뒷돈을 주고 불법어로를 한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중국 주간신문인 남방인물주간(南方人物周刊)이 2일 보도했음. 이 신문 기자가 북중 접경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이 많은 라오닝성 다롄(大連)과 단둥(丹東)의 어민들을 현장 취재한 결과 환경 오염과 어족 자원 고갈로 중국쪽 해역에서 더는 조업할 수 없게 된 선주들이 월경을 봐주는 대가로 북한에 돈을 주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것임.
- 단둥의 한 선주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단둥에서 국경을 넘어 고기잡이 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라며 "중국 쪽 바다는 이미 싹쓸이 조업으로 고기가 없어서 북한(해역)에 갈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음. 이에 따라 단둥과 인접한 압록강 하류의 중국 동강(東港)과 북한 철산 앞바다에 일종의 어로구역이 형성되는데 이곳에서 고기잡이하려면 작은 배는 하루에 1천 위안(약 18만원5천원), 100t 이상 큰 배는 1천 달러(약 118만원)를 내야 한다는 게 그의 증언임.
- 이 선주는 "고기잡이 허가권을 내주는 기구는 북한의 철산 수산사무소가 아니라 해안경계를 담당하는 부대"라며 "현재 북한 측에서는 미국 달러화를 좋아하지 않아 인민폐만 받는다"고 귀띔했음. 이어 "현 시세로는 2만



- 위안(약 370만원)을 건네면 2주간 고기잡이를 할 수 있다"면서 "돈을 내지 않는 어선은 압류된다"고 덧붙였다.
- 신문은 이번에 북한 측에 13일간 억류된 중국 어민들이 바로 이 해역에서 조업했으며 나포 당시 선원들의 증언을 인용해 중국 내 범죄조직과 북한의 일부 부패한 무장 세력이 결탁해 몸값을 노리고 저지른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풀려난 선원들은 중국 어선들을 나포한 북한 무장 세력이 사전에 선주의 이름을 알고 있었으며 괴선박이 어선에 접근해 군복을 입고 반자동소총으로 무장한 괴한들이 배에 오를 당시에도 선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 중국과 북한은 영해 이남의 서해 해역에는 동경 123도59분26초~124도26분 사이에 이어지는 긴 직사각형 모양의 '자유 통행 수역'을 설정했음. 이곳에서는 북한과 중국 선박 모두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다고 북중 국경조약은 규정하고 있음. 이는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을 하지 않은 북한과 중국 사이의 '실질적 수역'을 나누는 기준선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 언론들은 이번 어선 납치사건을 전하면서 동경 124도를 '북중 해상 경계선'으로 표현해왔음. 중국 어업 당국도 과거 수십년 동안 중국 어선들이 서해 동경 124도 선을 넘지 않도록 지도해왔고, 북한 당국도 여기에 큰 의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음. 이번 납치사건의 피해 선주는 "북한 사람들이 우리 어선에 오르면서 내 이름을 불렀는데 그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다"면서 "앞으로도 다른 배들은 동경 123도99분을 따라 그물을 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감히 이번 사건 해역에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 러·북 관계

● 김정은, 여당 의장 선출 메드베데프에 축전(5/28)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겸 노동당 제1비서가 러시아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 의장직에 오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에게 축하 전문을 보냈다고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음.
- 평양에 지국을 둔 이타르타스 통신은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앞서 26일 통합 러시아당 전당대회에서 의장으로 선출된 메드베데프 총리에게 축전을 보내 당의 단합과 강한 러시아 건설에 성공하길 기원했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또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모든 합의가 실현될 것이며 양국과 당 사이에 형성된 우호적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통신은 북한에서 노동당이 형식상 유일한 정당은 아니지만 다른 정당들은 사실상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한편 중국도 메드베데프 총리의 당 의장 선출을 축하하는 전문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통신은 후진타오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가 메드베데프 총리에게 축전을 보내 통합 러시아당이 러시아의 번영을 이루



는 데 큰 성공을 이루길 기원했다고 전했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해병대 첫 미국 전지훈련 참가(6/1)

- 해병대가 창설 이후 처음으로 미국 하와이에 소대급 전투부대를 파견해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다고 해병대사령부가 1일 밝혔다. 장병들은 1일 포항에서 미 해병대 헬기(MH-53)를 이용해 해상에 대기하고 있는 미 상륙함 뉴 올리언즈에 편승해 하와이로 이동한 후 10일부터 8월 3일까지 55일간의 훈련일정에 돌입함.
- 현지에 전개한 해병대 장병들은 미 해병대와 함께 하와이주 오아후섬에 있는 해병대 훈련장에서 수색·정찰 및 기계화전투, 방어전투, 안정화작전 등 도시지역 전투훈련과 정글 지역에서의 수색정찰 훈련을 26일까지 진행할 예정임. 27일부터 7월 7일까지는 다국적군 연합훈련으로 미국, 뉴질랜드, 멕시코 해병대와 함께 한 개 중대를 이뤄 중대급 전술훈련과 도시지역 전투, 헬기·상륙돌격 장갑차 탈출훈련을 함.
- 이번 훈련에 참가한 호주, 캐나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통가의 해병들은 미 해병대와 다른 중대를 편성해 한국 해병대와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훈련을 함. 다국적군은 2천m가 넘는 고지의 야외에서 숙영과 식사를 하면서 소대기동훈련, 기동사격 등 전술훈련을 7월 23일까지 함. 이어 7월 24일에는 미 상륙함정에 다시 편승해 8월 2일까지 림팩훈련에 참가함.
- 태평양 연안국 22개국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림팩훈련은 녹색국과 황색국의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유엔의 의결로 림팩군이 개입해 분쟁을 해결한다는 가상의 시나리오로 진행됨.
- 해병대는 지난 2000년부터 참관인 자격으로 림팩훈련에 동참해 왔고, 실제 훈련병력 참가에 대한 필요성과 미 태평양 해병대사령부(MFP)의 요청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소대규모의 병력을 파견하게 됐다.
- 이번 훈련의 지휘관을 맡은 김정훈(해사 56기) 대위는 "우리 군과 해병대의 대표라는 마음가짐으로 엄정한 군기를 유지한 가운데 솔선수범하겠다"면서 "한국 해병대의 우수성과 강인함을 유감없이 선보이겠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나. 한·일 관계

● "韓日, 일본군 위안부 문제 새 해결책 모색"(5/31)

-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새로운 해결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한일 외교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측은 최근 한국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3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했음. 이 방안의 정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본 측의 사과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음.

-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직접 배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추측이 나왔지만 한일 외교 관련 소식통은 "배상을 하려면 일본 측이 위안부를 강제 동원했다고 법적인 책임을 인정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일본 측이 그런 제안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음.
- 한국은 일본의 새로운 제안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에 미흡하다고 보고 "일본측이 진전된 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양국 간 논의가 추가로 진전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음.
- 앞서 일본 정부는 1992년 "위안소의 설치나 운영·감독 등에 정부가 관여했다"고 인정했고, 무리아마 도미이치(村山富市) 내각은 1995년 아시아여성기금이라는 민간기구를 만들어 피해자 보상을 시도했음. 하지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한국 시민단체들이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사과가 빠졌다"고 반발해 문제 해결이 무산됐음.
- 한국 정부가 최근 '위안부 문제에서 정부의 외교적인 해결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협상을 요구하자 일본 측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가능할지 지혜를 모아 계속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음.

● 日 외무상 "위안부 해결책 제시한 바 없다"(6/1)

- 일본의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은 일본군 중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한국에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음. 1일 지지통신에 의하면 겐바 외무상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위안부 문제와 관련 3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일부 한국 언론의 보도를 부인했음. 그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내보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것을 생각해보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으나 한국에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음.
- 한편 한일 외교소식통은 지난달 31일 일본 측이 사과를 포함한 3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음. 하지만 한국은 일본의 제안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에 미흡하다고 보고 일본 측에 진전된 안을 요구했으나 양국 간 논의가 추가로 진전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음.

다. 미·중 관계

● 中, 美·국방 3개국 방문에 경계심(5/31)

- 중국이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의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 3국 방문에 경계심을 드러냈음.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패네타 장관의 아시아 3국 방문과 관련해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류 대변인은 "미국은 이태 지역에서 중국의 이익을 존중하기를 바란다"고



- 도 했음. 그는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 양국은 최고지도자 간의 상호 방문과 전략대화를 통해 공통의 인식에 도달했다"며 "상호 공영의 관계인 중미 양국은 21세기 신흥대국 관계 속에서 공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류 대변인은 아울러 중국과 필리핀 간 황옌다오(黃巖島·스카보러섬) 대치 사태를 포함한 남중국해 문제에 언급, "직접 당사자가 담판과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중국해 문제의 현실적인 출구는 공동 개발"이라며 "관련된 각 측이 실무적인 협력을 하는 가운데 (영유권 분쟁이) 당사국 간 외교적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그의 이런 발언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미국이 개입해선 안 된다는 중국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해석됨. 그는 또 "남중국해의 상황을 복잡하게 하는 어떤 행동도 문제 해결에 불리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음.
 -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다음달 1~3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11차 아시아 안보회의(상그릴라 대화)에 참석하고서 베트남과 인도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임. 패네타 장관은 이번 아시아 3개국 순방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비중 있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라. 미·러 관계

● 러 외무부 주러 美 대사 反러 연설 맹비난(종합)(5/29)

- 러시아 외무부가 28일(현지시간) 마이클 맥폴 주러 미국 대사의 노골적 러시아 비판 발언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 ◇ "양국 대화 고의적 왜곡" = 외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맥폴 대사가 25일 (모스크바) 고등경제대학 학생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행한 발언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며 "연설에서 행한 러-미 관계에 대한 평가는 형식상 외교적 예의의 경계를 훨씬 넘어섰으며 본질적으로 양국 간 대화의 여러 측면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음.
- 맥폴 대사는 앞서 고등경제대학 연설에서 러시아가 옛 소련권인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우선적 영향권'을 주장하며 키르기스 마나스 기지에 주둔 중인 미군을 쫓아내기 위해 2009년 쿠르만베크 바키예프 키르기스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고 폭로했음.
- 맥폴은 이어 러시아 정부는 서로 상관없는 일들을 억지로 묶는 물밑 거래를 아주 좋아한다고 2009년 러시아가 '이란 문제에 합의하고 싶은가. 그러면 그루지야를 양보해라', '북한 핵 문제에 합의하고 싶은가. 당신들이 (러시아 내)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능하다'는 등의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다.
- 맥폴 대사는 또 미국이 러시아내 야권 지도자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시민단체들만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러시아가 워싱턴에 지국을 두고 있는 국영 뉴스 전문 TV 방송인 '러시아 투데이(Russia Today·RT)'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확산시키면서



-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음.
- ◇ 맥폴 대사 발언 조목조목 반박 = 러시아 외무부는 문제의 발언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역공을 퍼부었음. 외무부는 우선 맥폴 대사가 사용한 '우선적 영향권'이란 용어와 관련 "러시아 지도부는 한번도 이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러시아와 우선적 이해관계를 가진 나라들에 대해서만 얘기해왔다"며 "우리는 미국에서 관례화된 '영향권'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키르기스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 외무부는 "마나스 공군기지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누구에게 어떤 뇌물을 줬는지를 맥폴 대사가 더 잘 알 것"이라면서 "지금 미국에선 (2001년 마나스 기지를 임대했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 정부가 바뀌었지만 이같은 정권 교체가 중앙아에서 추진되는 미국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의 문제를 없애지는 못했다"고 비판했음.
 - 외무부는 이어 "러시아가 민감한 국제문제를 논의하면서 물밑 거래를 시도한다는 주장도 '영향권' 주장 못지않게 비외교적으로 들린다"고 지적했음. 성명은 "우리가 '이란과 그루지야의 맞교환', '북한과 러시아 인권상황의 맞교환' 등을 제안했다는 주장은 핵무기 비확산을 포함한 원칙적 문제들을 어떠한 거래의 대상도 될 수 없는 절대적 사안으로 간주하는 러시아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힐난했음.
 - 외무부는 또 "언론 자유의 신봉자인 맥폴과 같은 인사가 러시아 방송 RT의 미국 내에서의 전문적 활동을 왜 문제 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나무랐음. 외무부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맥폴의 발언과 행동이 당혹감을 불러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대사의 임무는 깊이 있는 지식에 근거해 주재국과의 점진적 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지 결코 언론에 근거없는 소문을 자극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음.
 - ◇ 크렘린궁 "대사는 외교적이어야" = 크렘린궁도 맥폴 대사 비난에 가세했음.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외교담당 보좌관(외교수석) 유리 우샤코프는 29일(현지시간) "대사들은 외교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직접 약 10년 동안 미국 주재 대사로 일해봐서 알지만 대사들은 자국 이익을 지키면서 긍정적 방향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충고했음. 우샤코프는 "양국 지도부는 가장 건설적인 협력을 지향하고 있다"며 "대사들은 이러한 분위기를 도와야 하며 자국 지도부의 업무에 불협화음을 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음.
 - 한편 맥폴 대사는 이날 러시아 외무부의 신랄한 비판에 대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좀 더 외교적으로 말하는 회술을 계속 배우고 있다"며 본인의 발언이 비외교적이었던 점에 대해 간접적으로 유감을 표시했음.

● 美 국무부 "러, 맥폴 대사 발언 오해" 주장(5/30)

-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 마이클 맥폴이 현지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연설



- 에서 러시아를 노골적으로 비판한 발언이 러시아측의 강한 반발을 사는 등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29일 (현지시간) "키르기스 마나스 기지와 관련한 맥폴 대사의 발언이 러시아 외무부에 의해 잘못 이해됐거나 해석된 것 같다"며 "대사는 현재 미국과 러시아가 키르기스와 굳건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키르기스는 아프가니스탄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국적군의 작전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얘기하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음.
 - 눌런드 대변인은 이어 맥폴 대사는 현재 미국과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양국 관계가 리셋(reset)관계 재설정) 정책 결과 긍정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음을 강조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음.
 - 맥폴 대사는 앞서 25일 모스크바 고등경제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러시아가 옛 소련권인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우선적 영향권'을 주장하며 키르기스 마나스 기지에 주둔 중인 미군을 쫓아내기 위해 2009년 쿠르만벡 바키예프 키르기스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고 폭로했음.
 - 맥폴은 이어 러시아 정부는 서로 상관없는 일들을 억지로 묶는 물밑 거래를 아주 좋아한다며 2009년 러시아가 '이란 문제에 합의하고 싶은가. 그러면 그루지야를 양보해라', '북한 핵 문제에 합의하고 싶은가. 당신들이 (러시아 내)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능하다'는 등의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음.
 - 맥폴 대사는 또 미국이 러시아내 야권 지도자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시민단체들만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러시아가 워싱턴에 지국을 두고 있는 국영 뉴스 전문 TV 방송 '러시아 투데이(Russia Today RT)'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확산시키면서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외교 대표로서는 이례적인 발언들을 쏟아냈음.
 - 이에 러시아 외무부는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맥폴 대사의) 러-미 관계에 대한 평가는 형식상 외교적 예의의 경계를 훨씬 넘어섰으며 본질적으로 양국 간 대화의 여러 측면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음. 그 이튿날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외교담당 보좌관(외교수석)인 유리 우샤코프도 나서 "대사는 외교적이어야 한다"며 건설적인 협력을 지향하고 있는 양국 지도부의 정책에 불협화음을 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음.
 - 맥폴 대사는 러시아 외무부의 신랄한 비판에 대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좀 더 외교적으로 말하는 화술을 계속 배우고 있다"며 본인의 발언이 비외교적이었던 점에 대해 간접적으로 유감을 표시했음.



마. 중·일 관계

● 日 도쿄지사, 中 맹비난.. "남의 것 훔치는 나라"(5/29)

- 극우적인 발언으로 유명한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일본 도쿄도 지사가 또 한 번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중국을 맹비난했음. 올림픽 유치에 관심이 적은 도쿄 시민을 조롱하기도 했음.
- 29일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시하라 지사는 이날 일본외국 특파원협회(FCCJ)에서 강연하며 "(중국인) 티베트를 정치적으로 말살한 끝없는 패권주의로 이번에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를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시하라 지사는 "(일본이) 센카쿠 문제로 중국을 무서워하면 히노마루(일장기 가운데의 붉은색 원)는 오성홍기(중국 국기)의 여섯 번째 별이 될지도 모른다"고 민족 감정을 자극했음. 그는 도쿄도가 민간인 소유로 돼있는 센카쿠 열도를 사들이겠다고 나선데 대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하지 않으니까 도쿄도가 하기로 했음. 집안 단속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 중국 인민일보가 자국 경비정의 센카쿠 주변 순찰 목적을 '일본의 실효 지배와 관리 등의 타파'라고 보도한데 대해서는 "남의 집에 강도질 하러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셈"이라고 비난했음. 한걸음 더 나아가 "(중국인) 다른 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발명품을 무시하고 훔치는 나라"라고 표현했고, 중국 시장이 과대 평가됐고 사업을 하기에 부적절하다며 미국이나 일본은 인도네시아나 인도 등 신규 시장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론을 폈음.
- 자신이 추진하는 2020년 하계 올림픽 유치에 도쿄 시민의 관심이 적은데 대해서는 "도쿄 시민은 사치스럽고, 무슨 일이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잘난체한다"며 "(도쿄 시민은) 다른 일본인과 다른 인종이다.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면 도쿄 시민들은 안 와도 된다"고 막말을 했음.

● "스파이 의혹 日 주재 中외교관, 출두 거부 귀국"(5/29)

- 간첩 의혹이 있는 일본 주재 중국 대사관의 외교관이 당국의 출두 요구를 거부하고 귀국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의하면 일본 경시청과 공안당국이 주일 중국 대사관에 근무하던 1등 서기관(45)이 외국인등록증명서를 부정 사용해 은행계좌를 트 뒤 일본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출두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고 귀국했음.
- 문제의 1등 서기관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정보기관인 총참모부 출신으로 공안당국은 일본 국내에서 첩보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그가 접촉한 인사들을 상대로 일제 조사에 나섰다. 이 외교관은 2007년 7월 경제당당으로 주일 중국 대사관에 부임했으며 과거 일본 정치인의 산실인 마쓰시타(松下)정경숙에도 적을 두고 있었음. 그는 인민해방군 산하 외국어학교를 졸업하고, 세계 각국에서 첩보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정



보기관인 총참모부 제2부에 소속돼 있었음.

- 일본 경찰은 그가 총참모부의 지시를 받고 외교관으로 위장해 스파이 활동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음. 그는 2008년, 과거 도쿄대 연구원이었을 때 취득한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이용해 외교관 신분을 속이고 은행 계좌를 개설했으며, 이 계좌로 중국에 진출하려던 건강식품판매회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10만엔(약 150만원) 안팎을 입금받았음. 또 이 건강식품판매회사가 홍콩에 설립한 관계회사의 임원으로도 취임해 2009년에는 보수로 수십만엔을 받았음. 이는 외교관이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상업활동을 금지하는 빈 조약에 저촉됨.
- 일본 경찰은 중국이 자국 스파이가 요인 등을 접촉할 경우 1인당 1만엔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문제의 외교관이 고문료 등으로 받은 돈을 첩보활동에 사용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일본 공안당국은 이달 중순 외국인등록증명서를 부정 경신한 외국인등록법위반 혐의로 이 외교관에게 출두를 요청했지만, 중국 대사관은 출두할 수 없다고 회신했으며, 같은 날 나리타 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일시 귀국했음.

● 〈中日 갈등 점입가경...외교관 첩보활동 의혹까지〉(5/29)

-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음. 해묵은 갈등 요인인 다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 다툼은 상시화한 상태이고 정치·외교 분야의 대립이 심각한 수준임.
- 지난 2010년 다오위다오 부근에서 일본 경비선과 중국 어선 간 충돌사건을 계기로 고조됐던 양국 갈등이 작년 말 고위급 회담으로 수습되는 듯했지만 최근 다시 '봉합선'이 뜰어지는 양상임. 가와무라 다카시(河村隆之) 일본 나고야 시장이 지난 2월 중국인의 '천추의 한'이라고 할 난징(南京) 대학살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데 이어 극우 인사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도쿄도지사가 지난 4월 센카쿠 열도를 돈으로 사자며 모금 운동을 추진한 게 직접적인 계기가 됐음.
- 중국은 '강(強) 대 강(強)'으로 맞섰음. 난징시는 나고야 시와 교류를 끊었음. 이시하라 도지사의 돌출 행동에 리커창(李克強) 상무부총리는 방일 계획 취소로 응징했음. 그러나 일본 역시 밀리지 않고 중국을 다시 자극했음. 중국이 끔찍이 싫어하는 '세계위구르회의(WUC)'의 지난 14~17일 도쿄 대회 개최를 허용했음. 이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13일 한·중·일 정상회담 기간에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에게 불쑥 인권 문제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고 제안했음. 시각장애 인권 변호사 천광청(陳光誠)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는 중국을 건드리는 제스처였음.
- 중국은 다시 외교적 냉대로 대응했음. 지난 21일 후진타오(胡錦濤)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바로 아래로 시진핑(習近平) 부주석과 같은 반열인 귀보송(郭伯雄) 부주석의 일본 방문을 전격적으로 취소했음. 아울러 후야오방(胡耀邦) 전 총서기 이들로 중일 우호 증진의 상징인 후더핑(胡德平) 중국 정협 상무위원의 일본 방문 계획도 없던 일로 했음.



- 이는 오는 9월로 예정된 중일 수교 40주년이 무색한 상황임.
-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최근 중국 외교관의 간첩 활동 의혹을 제시했음. 주일 중국대사관에 근무하던 1등 서기관이 외교관 신분을 이용해 첩보 활동을 했다는 것임. 2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문제의 외교관이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정보활동을 책임지는 총참모부 소속이라면서 일시 귀국한 해당 외교관의 신병을 넘길 것을 주문하고 있음.
 - 그러나 중국 당국은 이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관례로 볼 때 이번에는 중국이 일본 외교관 또는 민간인을 상대로 간첩 혐의를 잡아 공개할 공산이 커 보임.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일 양국의 갈등도 불만함. 우선 일본의 노다 총리가 26일 오키나와(沖縄) 나고(名護)시에서 열린 태평양·섬 정상회의에서 '태평양제도 포럼(PIF)' 가맹국들에 앞으로 3년간 5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일본은 PIF 가맹국에 지난 3년간 4억 9천300만 달러를 건넨 데 이어 다시 퍼붓겠다는 것임. 중국이 2005~2009년에 PIF 가맹국에 6억 달러를 지원한 것에 대한 대응카드로 해석됨.
 - 남중국해 황옌다오(黃巖島·필리핀명 스카보러 섬) 분쟁에도 일본은 슬그머니 끼어 중국을 견제하는 모양새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8개국이 공동 참여하는 28~29일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에서도 일본은 중국의 남중국해 '독식' 시도를 강도 높게 견제하고 있음.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작년 말을 기점으로 봉합되는 듯 했던 중일 관계가 다시 악화하는 것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급속하게 세력을 확대하려는 시도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음.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에도 전략적인 석유 수송로이자 천연자원의 보고인 남중국해를 중국이 거머쥐려고 강공을 펼치면서 국제사회가 이를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여기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중일 갈등이 전방위로 전개되고 있다는 얘기임.
 - 실제 미국은 인도와 일본을 잇는 봉쇄선으로 중국의 세력 확대를 차단한다는 전략으로 3국 간 군사·외교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남중국해와 인접한 호주 북부에 미군기지를 설치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음. 그와는 별도로 인도는 베트남, 미얀마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일본도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경제협력 지원카드를 바탕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임.
 - 중일 관계 악화를 양국 내부 정치상황과 연관해 볼 필요도 있음. 일본의 노다 총리 내각은 집권한 지 반년 만에 지지율이 20%대로 뚝 떨어졌음. 노다 총리 내각은 중국에 대한 '강공'으로 반동을 모색하는 분위기임. 수교 40주년을 맞아 말로는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고 하면서 중국 때리기에 열중하고 있음. 일본 내 보수세력을 의식한 제스처라는 해석이 나옴.



- 중국도 제4세대에서 제5세대 지도부로 권력이양이 이뤄질 제18차 당 대회를 앞두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보임. 일본에 약한 모습을 보이다가 민심 이반을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탓에 강경 일변도임. 근래 중국 내 인터넷과 웨이보 상에서 일본은 황연다오 사태의 필리핀, 서해 상에서의 어업 갈등 대상인 남북한과 더불어 단골 밭상으로 올라 있음.
 - 외교가에서는 국내외 상황으로 볼 때 중국과 일본이 단기간 내에 갈등 관계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그러나 이와는 달리 중일 양국이 한·중·일 3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위안화와 엔화의 직접 거래를 추진하는 등 경제적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음.
- **中 "주일 中대사관 외교관, 경제활동 안했다"(5/30)**
 -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30일 중국 외교관의 일본 내 경제활동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류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언론매체들이 최근 주일 중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1등 서기관이 (불법적으로) 경제활동을 했다고 보도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그같이 답했음. 그는 "해당 인물은 장기간 중국과 일본 관계를 연구해온 학자이고 나중에 중국 사회과학원 소속으로 주일 중국대사관에서 경제업무를 맡아왔으며 현재 귀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 일본 유력지인 요미우리신문 등은 문제의 중국 외교관이 외국인등록증명서를 부정 사용해 은행계좌를 열고 중국 관련 사업을 해왔다고 보도했음. 아울러 일본 정·관계를 상대로 첩보활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전했음.
 - 앞서 주일 중국대사관은 교도통신에 해당 인물이 부임하기 전 중국 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의 학자였다고 밝히고 임기가 만료돼 귀국했다고 해명했음.
 - **日, 中외교관 불법 경제활동 사건 검찰 송치(6/1)**
 - 일본 경찰이 '스파이 의혹'이 제기된 중국 외교관의 불법 경제활동 혐의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정작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경시청 공안부는 허위 외국인등록증명서로 은행 계좌를 만든 뒤 일본 업체에서 돈을 받은 혐의(외국인등록법상 허위신고)로 전 주일 중국대사관 1등 서기관(45) 사건을 전날 검찰에 송치했음. 검찰은 이 1등 서기관이 이미 중국에 귀국한 상태여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예상됨.
 - 경찰에 따르면 문제의 1등 서기관은 2008년 1월 과거 도쿄대 연구원 시절에 만들어둔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이용해 외교관 신분을 속이고 은행계좌를 만들었고, 그 후 이 계좌로 중국에 진출하려던 건강식품판매 회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약 150만엔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음. 이는 외교관이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상업활동을 하지 못하게 한 빈 조약에 저촉됨.



- 일본 경찰은 1등 서기관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정보기관 출신으로 추정되고, 2004년 8월에 인민해방군과 관계가 깊은 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의 도쿄사무소 설립에 관여했다는 점을 근거로 "1등 서기관의 활동이 (정보) 기관원으로서 조직적 활동이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음. 하지만 1등 서기관이 외교관의 입장을 벗어나 불법적인 정보 수집 활동을 했다는 점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바. 기 타

● "러·일 분쟁 쿠릴열도서 韓 근로자 50명 작업"(5/28)

- 러시아와 일본이 영토 분쟁을 벌이는 쿠릴열도에서 러시아 측이 추진하는 공사에 한국 기업 근로자 50명이 투입됐다고 아사히신문이 28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의하면 쿠릴열도의 4개 섬 가운데 이투롭(일본명 '에토로후')에 최근 해안 벽 공사를 하청받은 한국 기업의 기술자 등 약 50명이 상륙했음. 한국 기업 기술자들은 이달 19일부터 현지에 도착했으며, 건설 관련 자재와 기계류 등을 반입한 것으로 전해졌음.
- 해안 벽 공사는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쿠릴열도 사회경제발전계획'에 포함돼 있음.
- 일본 정부는 외국 기업이 분쟁 중인 쿠릴열도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러시아의 법적 입장을 인정하는 것인 만큼 용인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음.
- 쿠릴열도를 관할하는 사할린주의 알렉산드르 호로샤빈 지사는 지난 12일 한국과 중국 기업이 쿠릴열도의 4개 섬 가운데 이투롭과 쿠나시르(일본명 '구나시리')에서 인프라 정비와 농업생산에 참여한다고 밝힌 바 있음. 한국 기업이 참여한 해안 벽 건설 공사의 사업 규모는 약 14억 루블(약 53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 러시아는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북서쪽의 이투롭과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등 4개 섬을 일컫는 쿠릴열도에 대해 2차 세계대전 이후 합법적으로 귀속됐다고 실효지배하고 있으나 일본은 역사적으로 자국 영토라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

● 대만, 전략물품 수출금지 대상국서 中 제외(5/29)

- 대만 당국이 대량 살상무기 제조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전략 첨단기술 물품' 수출금지 대상국에서 중국을 제외하기로 했음. 대만 경제부는 이런 내용으로 무역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영자지 타이베이 타임스가 29일 전했다.
- 현행법은 중국과 북한,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쿠바 등을 전략 물품 수출 금지국으로 규정하고 있음. 당국의 사전 허가 없이 이들 나라에 전략 물품을 수출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과 수출 면허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이 주어짐.



- 하지만 이번에 중국이 금지 대상국에서 빠지면서 레이더, 광학 장비, 천문 기계, 정밀 기계장비 등 400여 종의 전략 물품을 추가로 자유롭게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반도체 제조장비 관련 12품목은 앞으로 수출이 제한됨.
- 대만 당국은 "대중국 수출 물품이 북한이나 이란 등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다시 수출을 엄격하게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 日 외무상 "中 군비증강 대응해 국방비 늘려야"(5/29)

- 일본 외무상이 중국의 군비 증강에 대응해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9일 NHK방송 등 현지 언론에 의하면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은 28일 밤 도쿄시내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중국의 군비 증강에 우려를 표시하고 일본이 주체적으로 국방력을 높이기 위해 방위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겐바 외무상은 "중국의 발전은 일본의 기회"라면서 "올해가 중일 국교정상화 40년인 만큼 중국과의 전략적 호혜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중국은 21년 연속 국방비를 두자릿수 늘려왔으나 유감스럽게도 그 내용이 불투명하다"면서 "현 시점에서 중국의 국방비는 일본의 약 2배이지만, 실제로는 그 보다 2배가 더 많다는 추산도 있다"고 지적했다.
- 그는 이어 "일본은 스스로 주체적인 국방력을 정비해 나가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면서 "(일본이) 방위비를 한층 증액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난세이(南西)제도 방면으로의 방위력 긴급 전개 능력 등을 일본 스스로가 본격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겐바 외무상이 취임 이후 이처럼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국방비 증액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것은 처음으로 중국 정부의 반발이 예상된다.

● 日, 서해에 北미사일 탐지 이지스함 검토(종합)(5/30)

- 일본 방위성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기 위해 한국의 서해 쪽에 이지스함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의하면 방위성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검증보고서(안)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고가 있을 경우 '발사 지역의 주변 해역에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 배치를 검토한다'고 명기했다.
- '발사지역의 주변해역'은 서해라고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았으나 한반도의 서해 공해상을 염두에 둔 것임. 이는 지난달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 일본이 한국의 동해와 동중국해에 이지스함을 배치했으나 미사일 발사 정보 파악에 실패했기 때문임.
- 방위성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의 원활한 정보 탐지 방안을 검토했으며 지난 28일 다나카 나오키(田中直紀) 방위상이 검증보고서를 승인했다. 일본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독자적인 정보 탐지를 위해 미군의 조기경계위성(SEW)에 의한 발사 정보 외에 미군의 이지스함과



공조해 가면서 발사 지역의 주변해역에 이지스함의 배치를 검토하기로 했음.

- 하지만 일본이 공해상이라고 하더라도 서해에 이지스함을 배치할 경우 이 곳에 민감한 군사적 이해를 가진 중국과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됨. 일본과 역사적 앙금이 있는 우리나라도 일본의 함정 배치에 반대 여론이 강할 것으로 보임.

● 日 외상, 한국기업 쿠릴 개발 참여에 항의(5/31)

-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의 러시아 쿠릴열도 개발 사업 참여에 항의했음. 31일 산케이신문에 의하면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과 러시아가 영토분쟁 중인 쿠릴열도(일본은 '북방영토'로 표기)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한 것과 관련 공식 입장을 밝혔음.
- 겐바 외무상은 "(한국 기업의 쿠릴 개발 사업 참여는) 마치 러시아의 관할권을 전제로 한 것 같은 행위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매우 유감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러시아 측에 항의했으며, 한국 정부에도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음.
- 일본 언론에 의하면 쿠릴열도 4개 섬 가운데 이투룹(일본명 '에토로후')의 해안 벽 공사를 하청 받은 한국 기업의 기술자 등 약 50명이 지난 19일 현지에 상륙했음. 해안 벽 공사는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쿠릴열도 사회경제발전계획'에 포함돼 있음. 일본 정부는 외국 기업이 분쟁 중인 쿠릴열도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러시아의 법적 입장을 인정하는 것인 만큼 용인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음. 한국 기업이 참여한 해안 벽 건설 공사의 사업 규모는 약 14억 루블(약 53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 러시아는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북서쪽의 이투룹과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등 4개 섬을 일컫는 쿠릴열도에 대해 2차 세계대전 이후 합법적으로 귀속됐다고 실효지배하고 있으나 일본은 역사적으로 자국 영토라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

● 한미일 국방 "北도발억제 정책공조 강화"(종합)(6/2)

- 한국과 미국, 일본 국방장관들은 2일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3국간 정책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자는 데 합의했음. 제11차 아시아 안보회의(상그릴라 대화)에 참석중인 김관진 국방장관,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 와타나베 슈 일본 방위성 부대신(차관)은 이날 싱가포르 상그릴라 호텔에서 가진 3국 국방장관 회담을 마친 뒤 언론발표문을 통해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이 3국 모두를 위협하며 이에 대해 3국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 이들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한반도·동북아·세계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리는데 동의한다"면서 "북한은 도발과 위협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러한 행동이 국제적 고립만을 심화시킬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특히 이들은 "북한에 대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폐기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 지난 4월16일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재확인한다"면서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 라는 안보리 결의를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3국은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인도 주의적 지원과 재난구호, 해양안보, 항행의 자유 보장, 비확산을 포함한 3국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음. 3국은 앞으로도 상그릴라 회의에서 3국 국방장관 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 아시아안보회의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관 아래 200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음. 이번 회의에는 미국과 중국, 일본, 독일, 아세안국가 등 27개국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안보전문가 등이 참석했음.

● 美해군력 아시아로 대이동..2020년까지 60%배치(6/2)

-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6척의 항공모함을 유지하는 한편 상당수 군함을 수년 내에 이 지역에 추가 배치하는 등 해군력 재배치를 추진키로 했음.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2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상그릴라 대화)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2020년까지 해군 함정의 60%를 아시아 지역에 배치하겠다고 하면서 이 같은 미 해군력의 아시아 집중 방침을 밝혔음.
- 미국의 해군력 아시아 집중 재배치 방침은 지난 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새 국방전략 발표를 통해 미군 전략의 우선순위를 아태지역에 두겠다고 천명한 이후 나온 첫 번째 구체적인 계획임. 패네타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은 해군 함대의 배치를 재조정할 것이라면서 현재 50% 정도인 아시아에 배치된 미 해군함정의 비율을 2020년까지 60%로 늘리겠다고 밝혔음. 그는 또 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항모도 6척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꾸준하고 신중하며 지속적인 방법으로 미군은 (군사력을) 재조정하고 이 핵심 지역에 강화된 능력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 해군은 현재 11척의 항모 중 6척을 태평양 지역에 배치해 두고 있으나 내년에 항모 엔터프라이즈호가 퇴역할 경우 5척으로 숫자는 줄어들게 됨. 패네타 장관의 언급은 2015년까지 취역할 신예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호를 태평양에 배치해 다시 태평양 배치 미 항모 숫자를 6척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임.
- 패네타 장관은 태평양 지역에 상당수 해군 함정, 구축함, 잠수함 및 연안전투함이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함정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이 모든 것은 아니라면서 아태지역은 훨씬 더 기술적 능력이 뛰어난 함정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미 해군은 현재 지원함을 포함해 총 282척의 군함을 보유하고 있음. 미 군함은 향후 2년내에 276척 정도로 약간 감소한 뒤 다시 300척 수준으로 증강될 계획임. 미 해군력의 아시아 집중 배치 방침은 중국의 위협을 막기 위해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냐는 분석임. 이 때문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간의 긴장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 그러나 패네타 장관은 해군력 재배치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면서 "우리가 아시아에 대한 개입을 재조정하고 강화하려는 것은 중국의 발전 및 성장과 완전히 양립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태지역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이 규칙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음.
- 이와 함께 패네타 장관은 한국, 일본, 태국, 필리핀, 호주 등과의 동맹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호주, 필리핀과 맺은 미 해병대의 순환배치 협정과 같은 협력적인 협정을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음. 그는 또 아태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양자, 다자차원의 군사훈련도 계속 증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음. 지난해의 경우 미국은 총 172차례의 각종 훈련을 이 지역에서 실시했음.
- 이 밖에 그는 국방비 감축에도 불구하고 해군력의 재배치를 비롯한 아태지역에 대한 미군의 중시 전략이 차질이 없을 것이라면서 "국방부는 이런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5개년 예산 청사진을 갖고 있다"고 말했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